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2.10(금) ~ 2023.02.16(목)

제공일시 2023 02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2.10(금) ~ 2023.02.16(목)

제공일시 2023 02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녹색수소 관련 규칙 채택, 프랑스 저탄소 원전도 포함

- EU는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1년 이상 지연된 녹색수소에 관한 규칙을 채택했다고 유력 티브가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2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했는데, 2030년까지 수소 생산량은 시간당 재생 에너지 생산량과 일치할 것(상관관계를 월 단위로 설정)과 2028년까지 수소 생산자들은 그들의 전해 질이 36개월 이하의 재생에너지 설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유럽의 수소 산업은 안도하고 있음 유럽에서 최종 투자 결정을 고심하고 있으며, IRA로 인한 미국 이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프랑스는 녹색수소에 저탄소 원자력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는데, 이러한 로비가 일부 수용되면서 프랑스의 승리로 여겨진다고 유력티브는 밝혔음

(Euractiv, 2023.02.12) Nikolaus J. Kurmayer 기자

2. EU, 2050년 건물 탄소중립 의무화 추진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가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산업위원회는 지난 9일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확정함
- 산업위원회는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의무화를 공공건물 2027년, 주거용 건물 2030년부터 부과하고 2033년까지 유럽의 모든 건물이 건물 에너지성능 지표 A-F 가운데 D 이상을 달성하게 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음
- 산업위원회가 확정된 법안이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기관 간 최종 타협 안 도출을 위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임

(투데이에너지, 2023.02.15) 홍시현 기자

3. EU의회, 2035년 모든 신차 무배출차량 합의

- 유럽의회가 오늘 340대 279표, 기권 21표로 승인한 규칙에 따르면 EU에 등록된 모든 신형 승용차와 경상용차는 2035년까지 배기가스 제로가 되어야 함
-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의 '핏로55' 로드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5% 줄이겠다는 EU 이니셔티브임
- 이 법안에는 2021년 수준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신차의 경우 55%, 신차의 경우 50%의 CO2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중간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
- 제안서의 추가 조치에는 2025년까지 자동차와 밴의 CO2 배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 EU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위원회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배출 한도와 실제 데이터 간의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2년마다 공표할 계획이 포함됨

(ESGToday, 2023.02.14) Mark Segal 기자

1. 영국 광고규제기관(ASA), ‘탄소중립’ 및 ‘넷제로’ 용어 광고주를 위한 지침 발표

- 영국은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광고주를 위한 용어 사용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음
- 새로운 지침에는 부적격 탄소중립, 넷제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이런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탄소감축 정보를 정확히 포함하도록 했음
- 또 미래의 탄소중립 목표에 근거한 주장을 할 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검증가능한 전략을 밝히고, 상세 또한 사용한 상세방식 정보를 포함해야 함
- ASA는 새로운 지침을 6개월 동안 모니터링하고, 어떤 형태의 증거들이 광고에서 입증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ESGToday, 2023.02.13) Mark Segal 기자

2. ISSB, 기후보고를 위한 글로벌 베이스라인 규칙을 승인

- ISSB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밝히는지를 위한 기업 기후보고 글로벌 베이스라인 규칙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밝혔음
- 이 규칙은 표준 점검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2024년 이후 연차보고서에 사용될 예정이며, 영국이나 나이지리아에서 아예 ISSB를 의무도입할 예정임
- 현재 가장 큰 관건은 EU와 미국의 기업 공시의무화와 연계 부분인데, 약 5만개 기업이 ESRS로 알려진 EU의 ESG공시를 적용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ISSB 규칙에 따라 동시에 공시해야 함
- ISSB와 EU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기후관련 정보를 상호운용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며, 이사회는 EU 규칙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ISSB 규칙의 부록에 EU 규칙 사용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했음

(Reuters, 2023.02.17) Huw Jones 기자

3. “2025년 적용” vs “가급적 늦춰달라”...당국, ESG 공시 의무화 시점 놓고 딜레마

- 금융 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적용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은 당국이 ESG 공시 의무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 부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반면, 국내 기업들의 주요 교역 대상인 유럽·호주·영국 등이 2025년께 도입하려는 분위기인 만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음
- ISSB는 올 상반기 중 일반(S1), 기후(S2) 분야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임
- ISSB가 올 상반기 S1과 S2를 발표한다고 해도 도입 여부는 개별 국가가 결정하면 됨

(서울경제, 2023.02.12) 서종갑 기자

*[관련기고][MT시평]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과제와 도전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1. 미, 테슬라 2024년까지 7500개 충전소 다른 전기차에 개방

-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50만대 전기차 충전기를 미 도로에 설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테슬라, GM, 포드, 차지포인트 등 충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계획을 발표했음
- 테슬라의 경우 2024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7500개의 충전기를 호환가능한 전기차에 개방하는데 동의했음
- 테슬라는 또한 뉴욕주 버팔로에서 새로 만들어질 충전기로 미국 네트워크의 슈퍼차저의 수를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백악관은 또 GM, 파일럿, 충전네트워크 EVGO가 미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파일럿 및 플라잉J센터에 2000개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별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했었음

(CNBC, 2023.02.15) Lora Kolodny 기자

2. '석유공룡' 셸 이사진 피소...“탄소중립 전환 실패로 회사 위기”

- 글로벌 거대 정유회사 셸의 이사진들이 탄소중립 전환 정책 마련에 실패해 회사를 위기로 몰았다는 이유 피소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9일 보도했음
- 변호사로 구성된 영국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는 잉글랜드 고등법원(1심 법원)에 셸 이사진 11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음
- 이번 소송은 탄소중립 전환 계획에 대한 기업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최초 사례로, 셸이 기업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데 실패할 경우, 회사가 위기에 처하고 주주들의 이익의 침해할 수 있다고 클라이언트어스는 주장했음
- 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어스는 영국 기업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형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셸은 클라이언트어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

(연합뉴스, 2023.02.10) 오진송 기자

3. 脫탄소 리스크 덮친 해운사...IMO "2050년 탄소배출 완전 금지"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7월 열리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0)에서 2050년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탄소연료 사용에 대해 막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해 전체 부담금 규모가 자그마치 800억달러(약 101조7520억원)에 달할 수도 있어 국내 해운 업계에 비상이 걸렸음
-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의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선박들도 2050년까지 모두 전환한다고 밝혔음
- 해운업 탈탄소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이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과 조성한 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금으로 후순위 대출 등을 지원해 선사들의 친환경 전환 투자를 유도할 계획으로, 2050년까지 총 71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매일경제, 2023.02.14) 박동환 기자

1. 삼성물산, 태양광·그린수소·모듈러...중동서 '新성장동력' 찾는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미래 먹거리 발판을 위해 중동 지역에 주목하고 있음
- 태양광, 그린수소·암모니아 등 신재생에너지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로 '제2의 중동 붐'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임
- 특히, 삼성물산은 그린수소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탈석탄 선언 이후, 2022년 탄소중립 추진안을 발표하여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용량 875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 설계업체인 자회사 웨소(Whessoe)의 역량을 활용해 액화수소 저장시설 및 재기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임

(매일경제, 2023.02.13) 정석환 기자

2. SK에코플랜트, 음식물폐기물을 연료로...바이오에너지시장 '출사표'

- SK에코플랜트가 14일 흥보에너지와 '바이오가스 고질화기술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흥보에너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자원재순환기업으로, 민간시설로는 국내 최대규모 수준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양사는 바이오가스 고질화 기술을 흥보에너지가 보유한 사업장에서 실증하고, 재생천연가스 생산 및 판매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임

(뉴데일리경제, 2023.02.15) 박정환 기자

3. LG엔솔, 국내 배터리업계 최초 'TCFD' 지지 선언...ESG경영 강화

-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에 지지 선언을 했다고 15일 밝혔음
- LG엔솔은 앞으로 배터리 생산부터 제조, 사용 및 폐기 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ESG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음
-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4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뒤 전 세계 생산시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오고 있음
- 이 밖에도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책임감 있는 노동 연합)에 가입해 ESG 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브릿지경제, 2023.02.15) 김태준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2.10(금) ~ 2023.02.16(목)

제공일시 2023 02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1047조원 에너지 위기 대응에 사용... "보조금 재판 짜야" 제안

- 벨기에의 싱크탱크 Bruegel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에 에너지 보조금 6810억유로(약 896조원)를 배정하고, 영국은 1030억유로(약 143조원), 노르웨이는 2021년 9월부터 81억유로(약 11조원)를 할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11월 집계한 비용이 7060억유로(약 963조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2개월 사이 약 80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이 중에서 독일은 2650억유로(약 361조원)를 사용하여 국가별 지출 순위 1위를 차지했음. 이를 이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가 각각 1500억유로(약 205조원) 미만을 지출했음. 1인당 기준으로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이 가장 많이 지출했음
- 이번에 집계된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 금액은 유럽 연합이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조성한 8069억 유로(약 1101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와 비슷한 규모임. 이번 데이터는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경쟁하려고 하는 가운데 27개 EU 회원국이 탈탄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국가 원조 규칙을 완화할 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 그러나 에너지 위기 대응에 사용된 대부분의 지출은 화석연료 지원금인 것으로 나타났음. 브뤼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 나라 정부가 휘발유나 전력가격 상한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 에너지 소매가격 억제책에 대부분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음
- 이어 브뤼겔은 대부분의 나라가 광범위한 자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에너지 지출 보조금을 늘린다면, EU 내부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 특히 독일은 다른 EU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보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음
- 브뤼겔은 주정부가 이러한 광범위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여력이 고갈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사실상의 화석 연료 보조금인 가격 억제 조치 대신 정부는 이제 소득 분배의 하위 2분위와 경제의 전략적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더 많은 소득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EU 기후프로그램 책임자 Jens Mattias Clausen(덴마크의 녹색 싱크탱크 콘시토(CONCITO)의 국제 기후 분석가 Martin Birk Rasmussen)은 EU는 현재 정보가 종종 최신 정보가 아니며 녹색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후 정책을 위한 보다 정확한 모델링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콘시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의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특히 PRIMES 모델)에 대한 이전 분석에서는 풍력, 히트 펌프, 전기 보일러 및 배터리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비용 및 성능 데이터가 이러한 녹색 기술의 급속하고 대규모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전기 보일러의 비용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다른 소스 보다 최대 10배 더 높게 나타났고, 열 부문의 녹색 전환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열 펌프에 대한 효율성 가정도 적절하지 않게 집계됐음
- 이는 잠재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기후 솔루션을 저해하고 보다 야심 찬 기후 목표의 비용을 과장하는 모델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음. 또한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개 조사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델링 데이터의 불투명한 특성이 사실 알 수 없는 수의 다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숨기고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음

(Euractiv, 2023.02.13) Frederic Simon 기자

(Euractiv, 2023.02.13) Jens Mattias Clausen 및 Martin Birk Rasmussen 기자

(임팩트온, 2023.02.15) 유미지 기자

- 그들은 앞으로 EU의 차기 기후 목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EU의 모델링에 대한 긴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델링은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정보 기반이며 비용을 과대 평가하고 녹색 전환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하지 않도록 최신의 투명한 기술 가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콘시토는 다양한 기술의 비용 및 성능에 대한 부정확하고 오래된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EU 모델링 도구의 핵심 기술 가정을 즉시 업데이트하여 모델링은 의미 있는 행동의 매개변수, 다양한 목표 수준의 타당성, 최적의 정책 조합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2030년 이후 기후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알리고 구체화할 영향 평가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유럽 기후법은 2040년의 기후 목표를 파리 협정에 따라 수행된 첫 번째 전 세계적 검토 후 6개월 이내에 제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봄에 있을 EU의 차기 기후 목표를 설정할 때 EU의 현재 모델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 관련 조치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져서 EU의 기후 목표와 추구해야 할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